



2006년 중간선거를 통해 본 변화하는 미국의 노동정치

이민동 (코넬대학교 사회학과 강사)

2006년 11월 7일 미국에서 실시된 중간선거는 1994년부터 시작된 12년간의 공화당의 상·하원 집권의 막을 내리고 민주당을 새로운 집권당으로 부상시키는 급격한 정세의 변화를 가져왔다.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선거 전 점유하고 있던 총 232석에서 29석을 잃었고, 민주당은 202석에서 15% 증가한 232석을 얻는 쾌거를 이루었다. 노동계는 이처럼 엄청난 정세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노동자들이었다고 주장한다. 미국산별노조총연맹(AFL-CIO)의 회장 John Sweeney는 중간선거의 결과를 평가하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에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우호적이고 진보적인 민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도록 이끈 계기는 노동운동의 기여가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Amber, 2006). 실제로, 이번 중간선거 기간 동안 노조는 사상 유래가 없었던 정치운동을 펼쳤다. 미국 최대 노조인 AFL-CIO는 20만 5천 명의 자원봉사자를 동원하여 825만 유권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했고, 3천만 노조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했으며, 또 2천만 노조 유권자들에게 편지를 보내 민주당 후보들을 적극 지원했다. 중간선거 운동 기간 동안 AFL-CIO를 비롯한 미국 내 각 노조가 투자한 총액은 1억 달러가 넘는다(Dine, 2006). 그 결과 이번 선거에 참여한 노조 관련 유권자는 총 투표자의 4분의 1에 달했고, 대다수의 노조 관련 투표자들은 민주당에게 투표했다. 이에 관련해 이 글은 노조가 이번 선거에 이처럼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 그들의 노력이 앞으로 미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배경

AFL-CIO의 회장 Sweeney는 노조와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국가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Congressional Quarterly, 2006). 지난 12년간 공화당의 기업 우호적인 경제정책은 노조의 정치적 영향을 꾸준히 저하시켜 왔다. 특히 경제의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은 적어도 최근 20년간은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노조는 지난 20여 년간 거의 향상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낮아진 미국 노동자들의 생활수준과 약해지는 노동권에 대해 파격적인 정치 변혁을 요구했다.

미국 노동자 임금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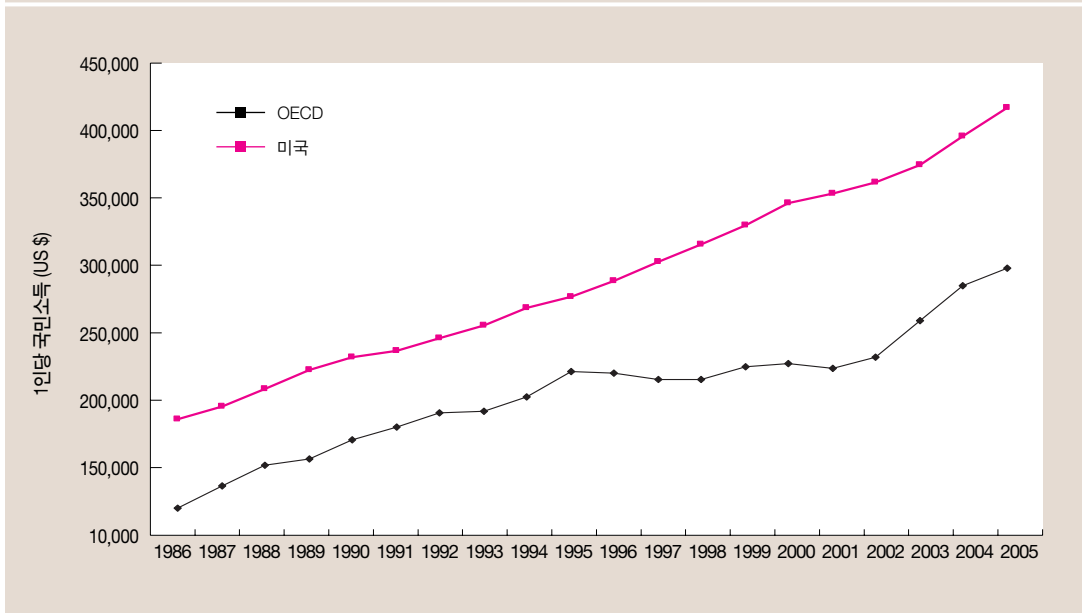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노조가 가장 많이 거론한 주제 중 하나는 지난 20년간 미국 노동자의 임금 추세이다. 미국 노동자의 임금은 1986년부터 2005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거의 향상되지 않았다(그림 1 참조). 미국 노동자 평균임금은 미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했던 1990년대에는 오히려

[그림 1] OECD와 미국 간의 임금 인상 추세 비교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6).

[그림 2] OECD와 미국 간의 1인당 국민소득 성장 추세 비교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6).

려 감소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야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20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2.7%에 그친다. 그 반면에 OECD국가들의 같은 기간의 평균임금 증가율은 60.9%로 미국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노동자들의 지난 20년간 임금이 거의 동일한 반면에,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해 왔고 기업의 이윤도 끊임없이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 노조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1986~2005년 사이에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30% 증가하여 같은 기간 OECD국가들의 250% 증가율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여준다(그림 2). 또한 미국 주식시장의 상태를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지수인 S&P 500 index는 같은 기간에 500%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미국의 전반적인 기업과 국가의 경제는 지난 20년간 엄청난 부를 창출해 내었지만, 그 창출된 부가 노동자들에게까지는 나누어지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미국 경제성장의 이득을 공유하지 못한 원인을 공화당의 기업 우호적인 정책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단결을 도모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 가장 주된 관심사는 노동자 최저임금 문제였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1997년부터 시간당 5.15달러로 고정되었는데, 이러



한 임금수준은 최저생계유지(빈곤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소득이다. 기업의 이윤 증대와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10년 가까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노조는 강변했다.

■ “Kentucky River” 판결

노조는 또한 지난 12년의 공화당 집권 기간 동안 노동권이 꾸준히 쇠퇴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노조는 지난 9월 29일 전국노사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가 내린 “Kentucky River” 판결을 든다. “Kentucky River” 판결은 전국노사관계위원회에서 내린 세 가지의 노동권 관련 판결에 관한 것으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판례는 “관리인(supervisor)”의 정의를 대폭 확대한 Oakwood Healthcare 와 관련된 판결이다. 1935년 처음 제정된 전국 노사관계법(Wagner Act)에서는 관리인이든 단순 노동자이든 누구든지 고용된 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받았다. 한 가지 제약은 관리인과 관리를 받는 노동자들이 같은 노조에 들어 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7년에 개정된 전국 노동관계 법령(Taft-Hartley Act)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인”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단체교섭을 시작할 권리를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리인들이 노조 형성의 움직임을 보인다든지, 기업의 반노조 정책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쉽게 “관리인”들을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관리인”에 대한 정의는 기업의 상부 관리층에 한정되어 있어서 이 법령이 노조 활동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았다. Oakwood Healthcare 판례는 이 “관리인”의 정의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Oakwood Healthcare 판례에 따르면 고용주는 동료 노동자들에 관한 약간의 관리 책임만 있어도 “관리인”이라고 정의하고 노조 참여와 조직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최하층 단순노동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고용인들이 “관리인”이라고 구분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 기본노동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노조는 우려를 표시했다. 비록 Oakwood Healthcare의 판결은 간호사들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 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노조는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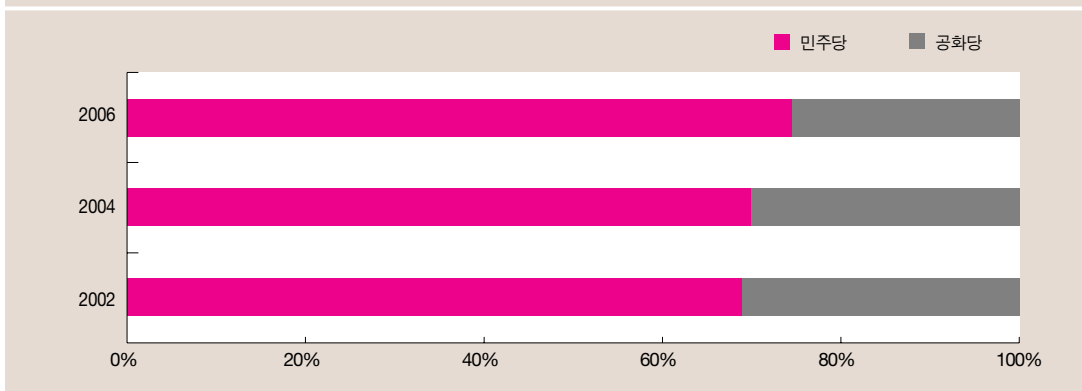
AFL-CIO는 이 판결에 대한 정식 항의문을 정부와 국제노동기구(ILO)에 보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중간선거에서 노동계는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동자들의 단합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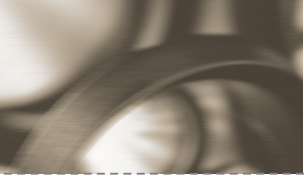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 노동계의 선거운동 참여와 그 결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조는 1억 달러 이상의 많은 자금을 투자하며 노조에 우호적인 민주당 후보들을 의회에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AFL-CIO는 4천만 달러를 썼고 선거 4일 전부터 16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 민주당을 후원했다. AFL-CIO에 버금가는 또 다른 노조 연맹인 Change to Win도 과거에는 경쟁 대상이었던 AFL-CIO와 힘을 모아 진보세력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 Change to Win의 자원봉사자들은 230만 이상의 노동자 가정을 직접 방문했고, 690만 노조 관련 유권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였다. 그 결과, 하원선거에서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총 680만 표를 더 얻었고, Sweeney는 “노조와 관련되지 않은 유권자들의 공화당 혹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민주당을 승리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680만 표 중 노조와 관련된 유권자의 표가 적어도 560만 표를 차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Greenhouse, 2006). 선거날 저녁 Peter D. Hart Research 조사팀에서 810명의 노조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노조관련 유권자들은 76% 대 24%로 압도적으로 민주당에게 표를 던졌다. 2002년과 2004년 실시된 지난 두 번 선거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이번 노조의 민주당 지지율은 현저히 증가했다(그림 3 참조).

[그림 3] 민주당과 공화당에 대한 노조 지지율 추세



자료 : Economist Intelligence Unit(2006).



이번 선거에서 노조 관련 유권자들의 민주당 지지율이 공화당 지지율에 비해 거의 50% 이상 높았던 것에 반해, 비노조관련 유권자들 경우에는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겨우 2%의 우위를 보였다. 그 뿐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AFL-CIO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해 Working America라는 조직을 만들어 범노동자적인 정치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현재 Working America는 170만의 멤버를 확보하여 점점 그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더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Working America 멤버들은 과거에 거의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Hart Research조사에 따르면 Working America 멤버들 중 80%는 2002년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이번 선거에는 참여했다고 대답하였고, 그 중 80%는 민주당에 투표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조의 기여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여한 것이 많은 만큼 노조의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크다. 노조들은 민주당 대표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었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선거 직후부터 민주당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활동을 시작했다.

■ 노조의 요구사항

그러면 노조가 새 정권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노조의 정치적 요구사항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노동자 임금 향상 : 위에서 이미 언급 된 바와 같이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임금 문제이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이슈였다. 노조는 최저임금 문제를 국가적인 관심사로 부각시키기 위해 여섯 주(애리조나, 콜로라도, 미주리, 몬타나, 네바다 그리고 오키호)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원선거와 함께 투표지에 올리기도 했다.
- 의료보험 확대와 의료비용 절감 : 노조는 미국 국민의 4천 8백만 명이 아직 어떠한 의료보험도 없으며 그 중 80%가 직업을 가진 노동자라는 것을 강조하며 의료보험이 전 국민에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노조는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Working America 멤버들을 중심으로 의료보험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갈수록 올라만 가는 약값, 특히 조제약 비용을 정책적으로 절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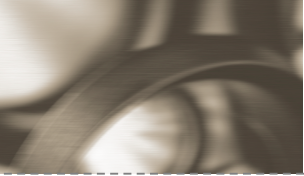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 반노조 정책 폐지 : 노조는 “Kentucky River” 판결과 같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들을 폐지하고, 노동자와 그 가정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 노동자 복지 : 노동자들의 노후 복지 차원에서, 노조는 기업들이 개인에게 노후 보장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지난 12년간 꾸준히 감소된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 무역정책 개선 : 노조는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임금이 저렴한 해외로 옮기는 기업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멈추고 미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세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 보상을 해 주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요구한다.

■ 변화의 가능성

노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견지하는 민주당은 노조의 요구에 따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화당에 대한 하원 우세는 232 대 201이고, 상원은 49 대 49로 큰 차이가 없고, 행정부는 아직 공화당이 통제하고 있다. 또한, 코넬대학교의 Cletus Daniel교수(School of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는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노조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되었지만, 그들은 “노동자의 권리나 노조의 적극적인 대변자도 아니고, 노조를 위해 중요한 정치적 위협을 감수할 자들도 아니라고” 말한다(Moira, 2006). 그렇게 때문에 얼마나 노조의 요구가 정책으로 관철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아래에는 위에서 언급된 노조의 다섯 가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정책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노동자 임금 향상

노조의 여러 요구사항 중 가장 넓게 지지를 얻고 있으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전반적인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는 것은 쉽게 실현될 수는 없지만,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비교적 어려움 없이 2년 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새로 국회의장이 된 Nancy Pelosi 캘리포니아 의원은 2007년 초에 110번째 국회가 시작되면 일주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현행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선언했고, 캘리포



니아 대표 George Miller 하원의원과 Edward M. Kennedy 메사추세츠 대표 상원의원도 최저임금 인상이 그들의 우선 과제라고 공포했다(Greenhouse, 2006). 부시 미국 대통령도 2006년 11월 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있어서는 민주당과 근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그 안이 통과되려면 반드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손해를 볼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 혜택과 같은 정부의 보조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은 이번 선거에서 여섯 주에서 이미 투표에 붙여졌고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미주리에서는 76%, 몬타나에서는 73%의 지지율). 이 투표의 결과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전체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을 감안할 때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안은 비교적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반노조 정책 폐지

최저임금 외에 전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문제는 정치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임금인상은 보편적으로 기업과 노동자 간의 교섭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권의 회복은 임금인상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노조는 벌써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노조를 더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하는 Employee Free Choice Act(EFCA)라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90%의 민주당 하원의원들로부터 지지를 약속 받았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은 직장에서 노조를 조직하기 위해선 반드시 전체 노동자들의 선거를 요구하여 노조 조직이 쉽지 않은 현행 제도 대신에, 노조 조직을 원하는 개별 노동자들의 서명에 의해서 노조를 보다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주가 노조 조직을 방해하거나 그로 인해 해고를 할 경우 징수되는 벌금을 크게 올리는 것이다.

노조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업 관리층의 권력이 약화됨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에 우호적인 공화당은 EFCA에 대해 이미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지로 이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EFCA가 투표에 붙여졌을 때 공화당이 의사진행 방해(filibuster)를 통해 법안의 통과를 막을 것이라 추측한다. 따라서, 새 의회가 노조가 원하는 만큼 노동권 회복에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의료보험 개선과 의료비용 절감


이번 선거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비노조 노동자들로 구성된 Working America 멤버들은 의료보험 개선을 가장 시급한 정치적 관심사로 내세웠다. Hart Research의 출구조사에 따르면 Working America 멤버들의 70%는 의료보험 개선이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했다. 또 Working America 멤버들의 93%는 미국 내 모든 어린이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Working America와 함께 전국민 의료보험 보장을 장기적인 목표로 정하고 추진 중이다.

의료비용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조제 약값의 증가이다. 노조는 약값을 감소시키기 위한 한 방안으로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가 제공하는 보험인 메디케어(Medicare)의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가격 교섭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케어의 제약회사 상대 가격 교섭 허용안은 노조원의 94%와 Working America 멤버들의 92%가 지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노조는 메디케어 가격교섭력 강화를 통한 제조 약값 저하를 의료제도 개선의 우선과제라고 정하고, 이를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한 압력을 넣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007년 국회가 개회될 때 제일 처음 거론될 안건 중의 하나로 메디케어 가격교섭력 강화를 포함시켰다(Choeff, 2006).

현재 정치적 움직임을 볼 때 메디케어의 가격교섭력에 관한 안건은 비교적 쉽게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만, 엄청난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반적인 의료보험 개선은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측에서도 “의료보험 정책의 개혁이나 사회보장제도의 확장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Miller, 2006). 노조 스스로도 그 어려움을 인정하며, 의료보험 개선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였고, 일단 메디케어의 가격교섭력에 관한 안건 통과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Smith, 2006).

사회보장제도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역시 쉽게 이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하원에서는 노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George Miller(캘리포니아) 의원이 노동위원회(Workforce Committee)의 회장직을 맡게 될 것이다. 선거 직후 인터뷰에서 Miller 의원은 “우리는 이 위원회를 노동자의 가족과 자녀의 복지를



관할하는 위원회로 회복시키고자 한다”고 말하며 노동자 가족들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Johnson, 2006). 민주당은 또한 “Innovation Agenda”라고 불리는 고등교육 지원강화 정책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축소시켰던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을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Choeff, 2006). 그러나 이미 정부의 예산이 엄청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쉽게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다.

무역정책 개선

이번 선거에서 무역정책도 선거의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지지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후보자들의 무역정책에 관한 의견은 누가 당선되는가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부분의 민주당원들은 현 정부의 “월가(Wall Street) 중심의 무역정책”이 노동자들의 생활을 파괴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노동자의 이권을 우선시하는 무역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무분별한 세계화의 노력이 미국 내 생산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새로운 의회는 반드시 임금이 저렴한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기업들에게 주는 세금 혜택을 폐지시키고,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기업들의 정치적 영향을 고려할 때, 이미 제정된 정책들로 인해 가속되는 세계화의 추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정치적 영향 확대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자유무역 정책에 관한 논의는 노동자들의 이권이 고려되며 더 심도 있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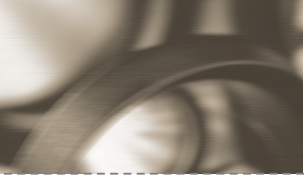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비롯해 주지사 선거까지 석권한 데는 노조의 영향이 컸다. 민주당이 노조의 힘을 얻어 의회의 다수당으로 부상함에 따라 노동자들과 관련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문제는 민주당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정책들을 추구할 것인가이다.

일단 공화당이 아직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또 양당간의 의석 차이가 적어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Miller, 2006).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안이나 메디케어 가격교섭력 강화안, 또 고등 교육 지원 회복안 등 몇 가지 안건은 비교적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본다. 위의 세 가지 안건이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물론 복잡한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 안건들이 전반적인 사회의 지지를 얻기 때문이다.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 안건은 전부 노조원들의 개인적인 이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 오히려 노조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회 여러 계층이 함께 그 이득을 공유하게 되는 정책들이다. 노조의 이권과 직결된 무역정책 변화나 노동권 회복에 대해서는 Working America 멤버만 보더라도 지지율이 많이 저조하다(Peter D. Hart Research, 2006). 결국 노조가 정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들이 얼마나 대대적으로 정치운동을 실시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범사회적 목적을 포용하고 노조원들 뿐만 아니라 비노조에 노동자들의 권리와 이득까지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번 선거 결과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변화의 불씨가 지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불 붙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조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선거 후 지금까지 AFO-CIO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노조 본부에서는 시간외(overtime) 근무가 빈번하다. **KLI**

참고문헌

- Amber, Michelle(2006), “Labor Leaders Credit Large Union Turnout with Changing Balance of Power in Congress.” *Daily Labor Review*, November 9, 2006.
- Choeff, Mark(2006), “Democratic Majority Would Shift the Workforce Debate, but Bills Face an Uphill battle.” *Workforce Management* 85(21).
- Congressional Quarterly(2006), “Labor Leaders Say Union Workers Critical to Democratic Wave.” *Congressional Quarterly*. Washington, DC, November 8, 2006.
- Dine, Philip(2006), “Unions Get up From Their Deathbed to help Deliver Midterm Election.” *St. Louis Post-Dispatch*. St. Louis, November 9, 2006.



- Greenhouse, Steven(2006), “Labor Movement Dusts Off Agenda as Power Shifts in Congress.” *New York Times*. New York, November 11, 2006.
- Johnson, Fawn(2006), “Miller to Chair Workforce Committee, Plans to Work on Bipartisan Agenda.” *Daily Labor Report*. Washington, Nov. 9, 2006.
- Miller, Matt(2006), “A Win–Win Accounting Trick” . *Fortune*. 154: 65.
- Moira, Herbst(2006), *The Return of Workers’ Rights?* Business Week.
- Peter D. Hart Research(2006), AFL–CIO Post Election Survey. Washington, Peter D. Hart Research.
- Smith, Steve(2006), “AFL–CIO Calls ‘Course–Changing Election a Victory for Working Families’ .” AFL–CIO Press Release. Washington, November 8, 2006.